

연구논문**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Growth of Civic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신동준* · 김광수** · 김재온***

Dong-Joon Shin · Kwangsoo Kim · Jae-On Kim

본 논문은 1997년과 2000년 이차에 걸쳐서 출간된 『한국 민간단체 종합』 자료를 소개하고, 이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를 수행한다. 시민단체 성장에 대한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는 회원수 정보와 설립연도 정보의 질을 데이터에 나타난 결측율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회원수 정보를 통해서 1996년에서 1999년 사이의 회원수 변화를 활동 분야에 따라 알아보고 그 결과를 시민단체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시민단체 성장의 주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시민사회 분야에서, 특히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회원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립되는 단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이 결과는 계획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사이에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있음을 반영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향을 생태학적 조직 이론에 근거해서 논의하고, 1945년부터 1996년까지 시민단체의 수적 성장 패턴을 설립연도 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이 의사 성장 곡선(pseudo-growth curve)을 생태학적 조직 이론에 근거해서 로지스틱 성장 곡선 모형으로서 제시하고, 비선형적 회귀분석을 통해 활동 범위와 분야별로 단체들의 수적 증가 추이를 비교해 본다.

주제어: 시민단체, NGO, 한국 민간단체 종합, 조직, 생태학, 성장 곡선

This study introduces and analyzes the data from Directory of Korean NGOs, which was published in 1997 and again in 2000, to conduct a quantitative research on the growth of civic organization in South Korea. This paper focus on the information on membership size and founding year which are essential indicators for the growth of organizations. Missing rates on those two indicators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학부 전임강사 신동준.

E-mail: djshin@kmu.ac.kr

**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The University of Iowa 사회학과 교수.

are checked to evaluate the quality of data. We examine the changes in membership size between the two time periods, 1996 and 1999. It shows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decrease in the membership size for civic and advocacy organizations that are oriented to national issues. It suggests the competition among the organizations over limited resources, which is consistent with an assumption of ecological theory of organization on non-linear growth pattern. Using founding year data from 1945 to 1996, we estimate pseudo growth curves of civic organizations based on logistic growth curve model to discuss different growth patterns of organizations across areas of activities.

key words : civic organization, NGO, Directory of Korean NGOs, organization, ecology, growth curve

I. 머리말

최근 한국 사회에서 시민단체¹⁾는 그 숫자와 역할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 시민단체 수의 급속한 증가는 그 동안 정부와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한국 사회 구성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증표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역할 면에서도 시민단체들은 각 활동 분야에서 전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며 다방면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이 연구에서 시민단체라는 용어는, 시민사회에서 정부와 시장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분야의 공식적 조직체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수의 대안 용어—비정부조직(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영리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시민단체(civil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사회단체(social organization), 민간단체(citizen organization)—들이 많은 것은 그 조직의 성격, 활동의 영역 등의 측면에서 학문적 개념 규정이 미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안 용어들 중에서 국내의 학술분야, 언론, 정부부처, 사회운동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시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이며(주성수·남정일·이남석 2003), 세계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단체라는 뜻에서 civil society organization(시민사회단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주장(정수복 2000)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 주목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의 성과들이 최근 방대하게 누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들의 대부분은 사회사적 의미에서 특정 시기에 활동한 단체 중심의 사례연구(신용하 1977; 조영건 1979; 박재호 1992; 이균영 1993) 또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통시적 기술(조희연 1989 1990a 1990b; 김동춘 1990; 윤수종 1992; 서경석 1993; 유팔무 1995; 김성국 1998)이거나, 한정된 사회부문의 시민단체 활동내용을 위주로 한 논의(이우재 1984; 장상환 1986; 송호근 1990; 정근식·조성윤 1990; 신광영·박준식 1990; 최경애 1992; 이상현 1993; 조영건 1993; 정수복 1994 1996; 박형준 1995)에 중점을 둔 것들 이었다. 이상의 연구들이 갖는 큰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인상은 지우기가 힘들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민사회의 성장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사회의 성장 그 자체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시민사회의 성장을 단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전반적인 시민단체의 성장을 살펴본 양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는 점은 시민사회 학문 분야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가 될 소지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그 양과 질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수의 증가와 시민단체 회원수의 증가라는 두 가지 지표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자료가 갖추어지면, 실제로 시민단체가 어떠한 형태로 증가해 왔는지, 시기별·분야별로 성장 형태에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를 낳는 외적·내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의 중요한 연구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론에 근거하여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온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에 <<한국 민간단체 총람>>이라는 의미 있는 자료가 출판되었고, 2000년과 2003년도 판도 이어서 출판이 되었다. 이 자료들은 각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총망라하여 그 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발표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자료에 주목을 하였고, 제한적으로 사용된 측면은 있지만 이 자료에 근거하여 좀 더 탄탄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다(예를 들어, 김혁래 1997; 김태룡 2003). 이 논문은 <<한국 민간단체 총람>>이라는 주제를 만한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 연구에 사용하려는 시도이다. 이 자료들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2003년도 자료도 출간되었으며, 이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지고, 동시에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시민단체에 대한 연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자료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선 파악한 후, 시민사회의 성장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실제로 연구에 적용하여 본다. 우선 시민단체 성장의 두 가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회원수 정보와 설립연도 정보의 질을 결측율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본다. 첫 번째 단계로 회원수 정보를 사용하여 단체들의 회원수 증감 현황을 1997년 자료와 2000년 자료 사이의 회원수 차이를 조사해서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설립연도 정보를 이용하여 시민단체들의 수적 성장 추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살펴볼 것이다. 생태학적 조직 이론에 근거하여 성장 곡선 모형을 제시한 후, 비선형적 회귀분석 결과로 시민단체들의 유형별 성장 패턴의 차이를 조사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자료의 학문적 가치와 개선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I. 자료소개

본 연구자들은 책자 형태로 2차에 걸쳐 발표된 <<한국 민간단체 총람>> 자료를 코딩 과정과 데이터 입력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 파일화 하였다. 1997년도에 발간된 자료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수의 단체들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2000년에 출판된 자료는 이전의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의 민간단체들을 유사한 방식을 통해 추가로 조사하였다. 2000년도 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단체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실제조사와 자료조사가 병행되었다(시민의 신문 2000). 조사 대상 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우편, 전화, 팩스, 방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제 조사를 하였고, 자료조사의 경우 연감, 백서,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²⁾.

1997년 총람은 1996년 9월 초까지 조사된 비영리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고, 2000년 총람에는 1999년 9월까지 조사된 단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에 출판된 총람은 민간단체들을 활동 분야에 따라 13개 대별 주와 그 밑에 36개 소별주로 나누고 있다. 이는 1997년 총람의 범주화에 변화를 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단체라도 1997년 총람과 2000년 총람에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00년 총람에서는 종교단체일지라도 사업내용에 따라 종교 분야가 아닌 주된 활동 분야로 포함되었다. 데이터 파일화 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의 활동 분야 구분은 2000년 총람에서 제시한 범주를 따랐다. 1997년 총람에서는 총 3,900여개 단체, 지부를 포함해서 약 만개의 단체가, 2000년 총람의 경우 총 7,600여개 단체, 지부를 포함해서 약 2만개의 단체가 포함되어 있

2) 자료조사의 출처를 자세히 살펴보면, 1) 정부 각 부처의 법인 및 사회단체 현황, 2) 각 지역별 연감, 백서에 수록된 단체, 3) 각 부문별 사회운동단체 현황, 4) 각 부문별 연감, 총람에 수록된 단체, 5) 인터넷 홈페이지 및 컴퓨터 통신 단체정보 서비스, 6) KT114 자료 검색, 7) 신문기사 분석 등이 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하지만 총람에서 조사된 단체라도, 그 단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 경우에는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외된 단체들은 모두 지부와 부설 기관들로, 이 단체들에 대한 정보는 주소와 연락처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데이터는 총 6,577개 단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1〉 1997년 자료와 2000년 자료에서 조사된 단체 수 비교

활동분야 (대별주)	'97년 자료에만 포함	'00년 자료에만 포함	'97년과 '00년 자료 모두에 포함	총계
시민사회	173(14.6%)	568(47.9%)	446(37.6%)	1,187
지역자치/빈민	37(13.7%)	188(69.6%)	45(16.7%)	270
사회서비스	168(18.3%)	448(48.9%)	300(32.8%)	916
환경	44(13.5%)	199(61.0%)	83(25.5%)	326
문화	173(21.5%)	355(44.1%)	276(34.3%)	805
교육/학술	98(5.5%)	1,055(59.7%)	613(34.7%)	1,766
종교	140(56.7%)	27(10.9%)	80(32.4%)	247
노동	47(24.9%)	60(31.7%)	82(43.4%)	189
농어민	12(14.1%)	29(34.1%)	44(51.8%)	85
경제	195(28.3%)	195(28.3%)	298(43.3%)	688
국제	18(28.1%)	18(28.1%)	28(43.8%)	64
기타	13(37.1%)	9(25.7%)	13(37.1%)	35
총계	1,118(17.0%)	3,151 (47.9%)	2,308(35.1%)	6,577 (100%)

우선 두 시기의 자료에 포함된 단체들을 활동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두 자료간의 차이를 간략히 비교해 보겠다. 조사된 단체의 수는 2000년 자료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에 따르면 교육/학술,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민간단체들이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수가 2000년 자료에서도 추가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의 셋째 칸 마지막 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에 포함된 총 6,577개 단체들 중 3,151개 단체가

2000년 자료에서 새롭게 조사되었다. 이는 데이터에 포함된 총 단체 수의 47.9%에 이른다. 특히 지역자치/빈민, 환경, 교육/학술, 사회서비스, 시민사회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2000년 자료에 추가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종교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의 단체들만이 추가로 2000년 자료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자료에서 새롭게 조사된 단체들은 1997년 자료를 위한 조사 이후에 설립된 신생단체들이거나, 아니면 1997년 자료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가 2000년 자료에서 뒤늦게 조사된 단체들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단체들을 분류하여 본 결과, 904개 단체들이 1997년 조사 이후에 설립된 단체들임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2,247개 단체가 1997년 조사에서 누락되었다가 2000년 조사에서 새롭게 발견된 단체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 자료는 그 질에서 적지 않은 향상이 있었다고 하겠다. 1997년 조사 이후, 즉 1996년 9월 초 이후, 새롭게 설립된 단체들을 활동분야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수가 시민사회 분야의 단체였고, 그 다음이 교육/학술 분야 단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지역자치/빈민, 환경 분야 단체들 역시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수가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III. 시민단체 성장의 지표

시민단체의 성장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지표로 각 시기에 설립된 단체들의 수와 그 단체들의 회원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시민단체들의 수가 증감해 온 추세와 이 단체들에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해 왔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시민단체 성장의 패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시기별 시민단체 수라는 성장 지표와 관련하여 데이터는 각 단체들이 언제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설립연도 정보를 통해서 시기별로 설립된 단체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시민단체의 성장 패턴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들이 보고한 회원수 정보는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과 2000년 자료 모두에서 조사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두 시기에서 나타나는 회원수의 차이는 최근 3년 동안 그 단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조사된 모든 단체들이 이 정보들을 보고한 것은 아니므로, 우선 이 정보들을 이용하기 전에 결측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³⁾.

우선 설립연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결측율은 8.5%이고, 2000년 자료만 보았을 때는 결측율이 8.7%이다⁴⁾. 지역자치/빈민(12.6%), 농어민(11.8%), 교육/학술(11.4%), 종교(10.5%) 분야의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측율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특정 분야에 속한 단체들이 눈에 띄게 높은 결측율을 보이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립연도에 대한 정보의 경우, 결측율 문제는 일단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회원수 정보의 결측율은 1997년 자료의 경우 43.2%, 2000년 자료의 경우 45.3%에 이른다⁵⁾. 적어도 반 수 이상의 단체들의 회원수를

3) 앞서 언급했듯이 총람에서 정보를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은 다수의 단체들(지부와 부설기관)이 애초에 본 데이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결측율의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4) 1997년 총람에서만 조사된 단체들의 경우(7.4%)보다 2000년 총람에서만 조사된 단체들의 경우(14.5%)에 설립연도 정보의 결측이 일반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1997년 자료와 2000년 자료 모두에서 조사된 단체들의 경우에는 결측율이 0.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단체들이 대체로 파악하기 용이할 것이고, 주로 이러한 단체들이 두 시점 모두에서 조사되었다고 추측해 볼 때, 활동이 활발한 단체들의 경우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상당히 높은 결측율이다. 그리고 만약 회원수 정보의 결측이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적인 시민단체의 회원수를 분석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불행히도 특정 분야에 속한 단체들의 정보에서 결측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자료의 경우 교육/학술 관련 단체의 결측율이 79.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농어민(57.1%), 노동(52.7%), 종교(50.9%), 사회서비스(38.5%) 분야 단체들이 매우 높은 결측율을 보였다. 2000년도에 수집된 자료에서도 교육/학술 관련 단체가 역시 매우 높은 결측율을 보였다(89.8%). 또한 종교(41.1%)와 노동(33.1%)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회원수 정보가 역시 2000년 자료에서도 다수 누락되었다.

IV.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 양상: 회원수 증감의 측면

비록 결측율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데이터에 포함된 회원수 정보를 통해 1996년과 1999년 사이에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의 수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기간 동안 시민단체의 성장 양상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⁶⁾.

-
- 5) 1997년 자료보다 2000년 자료에서 더 높은 결측율을 보이는 것은 신생 단체들의 회원수 정보 결측 정도가 높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신생 단체들의 결측율만을 따로 조사해 본 결과, 교육/학술 단체들이 역시 가장 높은 결측율을 보이고 있고(70.8%), 노동 관련 단체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결측율을 보였다(40%).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997년도 총람을 위한 조사 이후에 설립된 신생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훨씬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 따라서 2000년도 자료에서 회원수 정보의 높은 결측율은 1997년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2000년 자료에서 새롭게 조사된 기존의 단체들 때 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활발한 활동 등으로 잘 알려져 파악하기 용이한 단체들이 보다 양질의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 6) 2000년 자료에 포함된 단체들 중 9.7%에 해당하는 736개의 단체는 기존 단체들의

〈표 2〉 회원수 현황: 2000년 자료

	회원수를 보고한 단체				지부나 산하단체를 갖는 단체			
	단체수	회원수 합	회원수 평균	표준편차	단체 수	회원수 합	회원수 평균	표준편차
시민사회	412	13,152,402	31,923.31	171,749.94	103	9,099,809	88,347.66	313,775.02
지역자치/민민	151	861,196	5,703.28	57,126.88	6	35,463	5,910.50	11,915.75
사회서비스	395	6,560,284	16,608.31	99,694.32	102	4,998,730	49,007.16	188,805.72
환경	147	784,617	5,337.53	16,252.74	34	496,786	14,611.35	25,350.76
문화	363	9,395,335	25,882.47	236,730.14	42	1,219,376	29,032.76	99,810.50
교육/학습	130	387,684	2,982.18	18,519.48	16	271,240	16,952.50	51,322.00
종교	50	1,820,742	36,414.84	161,102.36	13	165,010	12,693.08	28,252.82
노동	36	156,434	4,345.39	10,597.64	8	139,586	17,448.25	17,456.28
농어민	45	305,763	6,974.73	19,457.86	16	194,011	12,125.69	27,306.35
경제	195	724,683	3,716.32	11,638.66	31	284,454	9,175.94	17,160.28
국제	32	305,694	9,552.94	26,111.37	8	58,601	7,325.12	18,064.91
기타	13	7,118,795	547,599.62	1,648,146.20	5	6,330,535	1,266,107.00	2,648,373.43
총	1969	41,573,629	21,114.08	194,842.86	384	23,293,601	60,660.42	360,991.73

우선 참고적으로 2000년 자료에 나타난 회원수의 현황을 살펴보겠다. 앞서 지적했듯이 회원수 정보의 경우 결측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표 2〉에서 제시된 수치들을 실제 현황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회원수를 보고한 단체들이 주로 활발히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제 하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시민단체들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분야별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나마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회원수 현황 자료는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는데, 하나의 범주를 추가한 이유는 지부나 부속단체를 두고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전국적 조직들의 회원수 현황을 따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⁷⁾.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단체들 중 상당수는 소속 단체들의 수를 회원수로 보고하고 있고, 보고된 회원수도 소속 단체들의 회원수를 합한 숫자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합체 성격의 단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7) 지부와 부속단체의 회원수는 모단체의 회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부와 부속단

<표 2>에 따르면 시민사회 분야에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 분야, 기타 분야, 그리고 사회서비스 분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회원수를 보고한 단체들의 수를 감안한 평균 회원수를 보았을 때, 기타 분야의 단체들이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종교, 시민사회, 문화 분야 단체들의 회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각 분야의 단체 수를 감안할 때 대체로 기타 분야는 적은 수의 대규모 단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시민사회 분야는 비교적 다수의 소규모 단체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준편차들을 살펴 보면 각 분야에서 단체들의 회원수가 상당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기타 분야의 단체들에서 두드러진다. 각 분야의 단체들에 참여하는 회원수의 총합을 보면 노동 분야에 가장 적은 수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자료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노동 분야 단체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평균 회원수에서는 교육/학술 단체들이 제일 적음을 알 수 있다.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활동 분야를 좀더 세분화된 소분주로 나누었을 때, 회원수 총합과 회원수 평균 모두에서 체육과 레저, 여성, 시민사회 일반 분야가 두드러졌다.

지부나 산하단체를 갖는 단체들만 보았을 때도 역시 시민사회, 기타, 사회서비스, 문화 분야의 순으로 가장 많은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원수 평균의 경우에도 기타,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문화 분야가 상대적으로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노동과 교육/학술 분야의 경우 지부나 산하단체를 갖는 비교적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만 감안했을 경우 비교적 많은 평균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회원수 합과 회원수 평균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그리고 비교적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만을 따로 살펴보았을

체는 <표 2>에서 제외되었다.

경우에도, 시민사회, 사회서비스, 문화, 기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작위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결측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이 수치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적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⁸⁾. 하지만 적어도 분야별로 시민들의 참여 정도를 비교해 본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1997년 자료와 2000년 자료 사이에 나타난 회원수의 변화

	회원수를 보고한 단체 (지부와 산하단체 제외)			지부나 산하단체를 갖는 단체		
	단체수	회원수 전체 차이	회원수 차이 평균	단체수	회원수 전체 차이	회원수 차이 평균
시민사회	170	-4,014,086	-23,612.27	54	-3,976,474	-73,638.41
지역자치/빈민	30	1,150	38.33	1	131	131.00
사회서비스	160	269,434	1,683.96	60	190,586	3,176.43
환경	49	73,047	1,490.76	11	63,863	5,805.73
문화	153	2,332,323	15,243.94	19	859	45.21
교육/학습	52	231,048	4,443.23	11	204,911	18,628.27
종교	32	442,936	13,841.75	10	2,157	215.70
노동	17	-8,992	-528.94	4	11,500	2,875.00
농어민	11	35,079	3,189.00	4	30,102	7,525.50
경제	68	22,214	326.68	18	23,052	1,280.67
국제	12	19,598	1,633.17	3	-7,880	-2,626.67
기타	6	679,577	113,262.83	2	662,559	331,279.50
총	760	83,328	109.64	197	-2,794,634	-14,185.96

8)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단지 1,969개 단체들의 회원수를 감안했을 뿐인데도 총 회원수가 4천만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개의 단체들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둘째, 현재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명목상의 회원들이 누적적으로 모두 보고되었을 가능성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의 회원수를 부풀려서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자료에서 제시된 회원수 정보는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1997년 자료와 2000년 자료 모두에서 회원수를 보고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3년 사이의 회원수 차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지부와 산하단체를 제외한 단체들의 정보와 지부나 산하단체를 갖는 단체들에 대한 정보, 이렇게 두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두 시기에서 모두 회원수를 보고한 단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되는 단체들의 수는 첫 번째 범주의 경우 760개, 두 번째 범주의 경우 197개로 그 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활동 분야별로 단체들을 다시 구분해 보았을 때, 범주별로 분석에 포함된 단체의 수가 매우 적은 경우 여기서 제시된 수치를 받아들이는 데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우선 전체 단체들의 회원수를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3년 간의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총 83,328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체당 109.6명의 회원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회원수 증가에서는 문화, 기타, 종교 분야가, 평균 회원수에서는 기타, 문화, 종교 분야의 순으로 증가의 폭이 커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 성장의 주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시민사회 분야의 경우 오히려 회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노동 분야 역시 회원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표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세부 분야로 분류한 소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 시민사회 일반 분야 26개 단체들의 경우 평균 11,928.6명의 회원이 감소하였고, 41개 여성 분야 단체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무려 90,680.6명의 회원이 감소하였다. 다른 세부 분야 단체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여성 단체들은 그 기간 동안 가장 큰 회원수 감소 폭을 보였다.

지부나 산하단체를 갖는 비교적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회원수는 오히려 2,794,634명이 감소하였고, 이는 단체당 평균 12,185.96명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회원수의 감소는 거의 전적으로 시민사회 분야 단체들의 회원수 감소

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시민사회 분야의 회원수 감소는 상당부분 비교적 전국적 규모 단체들의 회원 감소 때문임을 역시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 분야의 세부 범주를 살펴보면 역시 시민사회 일반 분야(평균 38,173.6 명 감소)와 여성 분야(평균 232,395명 감소)의 회원수 감소가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세부 범주의 경우 자료에 포함된 단체의 수가 각각 8개와 16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물론 자료의 제약 상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이는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민사회 분야의 기존 단체들, 특히 비교적 대규모의 단체들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오히려 상당 정도의 회원수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회원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 시민단체들의 성장 정도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주요 활동 영역들이라고 여겨지는 분야의 경우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뒤에 <그림 1>과 <그림 2>에서도 제시되듯이 시민단체의 수는 급격한 속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회원수의 감소 현상은 기존의 단체들이 신생 단체들에게 회원을 빼앗기는 현상, 즉 시민단체들 사이의 경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이나 재정적 지원과 같은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해 봄야 할 사항은 이 기간에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비의 납부를 전제로 하는 회원 가입에 많은 시민들이 소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IMF 체제 이후 시민단체의 주요 회원 풀이 되는 중산층의 해체 경향을 더불어 생각해 볼 때(차성수 1998: 189), 시민단체들간의 회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도 매우 치열해졌을 것임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신생단체의 계속적인 추가 설립과 경제위기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시민단체들간의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기의 시민단체 성장을 분석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⁹⁾. 위의 표에서 제시된 수치는 기존의 단체들을 대상으로 회원수의 증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회원수의 감소 추세는 신생 단체들에게 회원들을 빼앗기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거 여러 개의 단체들에 가입하고 있던 시민들이 이후에 자신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소수의 단체들에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V. 시민단체 성장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비록 제한된 기간 동안의 제한적인 자료를 통한 분석이었지만, 회원수 지표를 통해 시민단체 성장의 추이를 짚어본 결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단체들 사이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 시민단체들의 수적인 성장을 생태학적 조직 이론을 통해서 설명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조직 유형의 성장율은 그 유형에 속하는 단체들의 설립율과 해체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설립율과 해체율은 각 유형에 속하는 단체들의 수, 즉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Hannan & Freeman 1977; Hannan 1989; Carroll & Hannan 1989). 이 이론은 설립율의 경우 대략 개체(단체)군의 크기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해체율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결과적으로 개체군은 낮은 밀도 수준에서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급격히 증가하지만,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으로 성장율은

9)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이 취약한 재정기반, 인적자원의 부족, 조직 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시민운동 역량의 비효율적 배분과 중복투자의 만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시민운동단체 관계자들의 자기비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차성수 1998: 182).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설립율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두 가지 형태의 제도적 과정이라고 주장된다. 첫 번째 제도적 과정은 권력을 지닌 행위자의 지지에 근거한다(Stinchcombe 1968; Hannan 1989).

예를 들어서 국가가 특정한 형태의 조직들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조직들이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 과정은 강제적 동형성(coercive isomorphism)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DiMaggio & Powell 1983). 두 번째 제도적 과정은 특정 조직 형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Meyer & Rowan 1977). 만약 제도화라는 것이 어떠한 조직 형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과정을 뜻한다면, 한 형태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Hannan 1989: 394).

한편 해체율의 주된 요인은 경쟁 과정이다.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조직가들, 회원들, 후원자들 등과 같은 자원들이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점점 많은 수의 조직들이 도태된다(Hannan 1989: 395). 따라서 충분한 자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직들만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제도화 과정과 경쟁 과정은 둘 다 설립율과 해체율에 유관하다. 제도화 과정은 밀도와 해체율 간의 부적 관계를 낳고, 경쟁 과정은 또한 밀도와 설립율 사이의 부적 관계를 낳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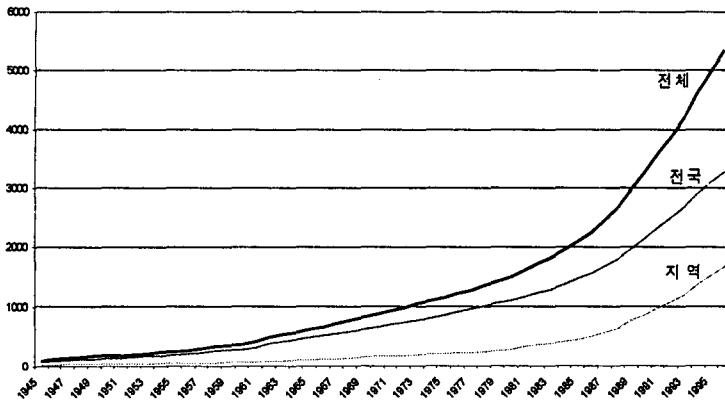
생태학적 조직 이론은 원래 이윤을 추구하는 공식적 조직을 고려하여 구성된 이론이지만, 이 이론의 범위는 비영리 조직으로도 쉽게 확대될 수 있다(Pfeffer 1982: 192; e.g., Edwards & Marullo 1995; Popielarz & McPherson 1995; McPherson & Rotolo 1996; Sandell 2001).

이에 따르면 특정한 조직 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히 그 수가 증가하다가 서서히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는 비선형적 증가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시민단체라는 특정한 유형의 단체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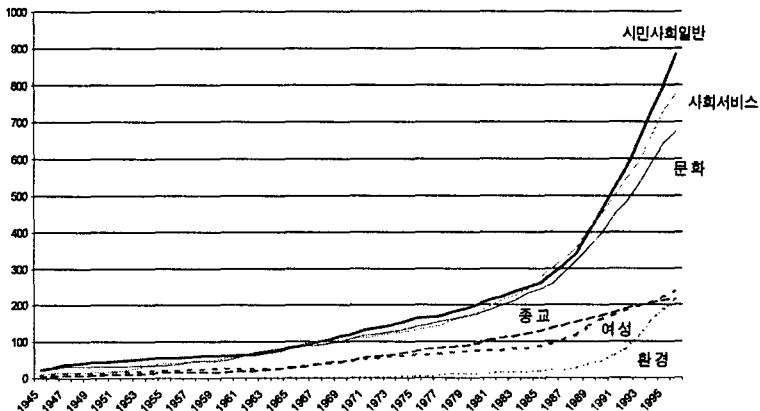
VI.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 양상: 단체의 수적 증가 측면

단체 설립연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동안 시민단체의 수가 어떤 형태로 증가해 왔는지를 간접적이나마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해인 1945년부터 시작해서 1996년까지 시민단체들의 누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1996년에서 시점을 끊은 이유는 최근 3년 동안에 설립된 단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자료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¹⁰⁾. 현재의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단체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점에서 여기서 제시되는 데이터는 시민단체의 성장 양상을 파악하기에 제한적이다. 하지만 단체들이 해체되는 비율이 각 분야에 걸쳐서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면, 그림과 같은 의사 성장 곡선(pseudo-growth curve)을 통해 시민단체의 성장 추이와 그 양상을 분야별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10) 1997년에 조사된 단체의 수와 2000년에 조사된 단체의 수 사이의 차를 그 단체들의 설립연도에 따라 살펴보면,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설립된 많은 수의 단체들이 2000년 조사에서 추가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추세로 볼 때, 설립된 지 오래된 단체들일수록 2000년 조사에서 추가된 단체들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사가 오래된 단체들이 잘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쉽게 조사 대상으로 파악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들의 경우 숫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 1990년에서 1991년에 설립된 단체들의 수는 두 시기의 자료간에 31개에서 33개의 차이를 보이는 반면, 1994년과 1995년에 설립된 단체 수의 경우는 각각 70개와 60개, 그리고 1996년에 설립된 단체 수는 191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6년에 설립된 단체들의 경우, 1997년 자료의 조사 시점이 1996년 9월 초까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큰 숫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다. 하지만 1994년에서 1995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들의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설립된 단체들이 1997년 자료에서 많이 누락된 이유는 최근에 설립된 신생 단체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0년도 자료에서 1997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들의 경우 실제 설립된 숫자보다 지나치게 적게 보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료를 이용할 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단체 활동 범위별로 본 한국 시민단체의 의사 성장 곡선



〈그림 2〉 주요 활동 분야별로 본 한국 시민단체의 의사 성장 곡선

는 비선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양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단체들의 수가 60년대와 70년대까지는 매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특히 민주화 시기에 해당하는 80년대 중반에서 90

년대 초반에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범주별로 단체 수의 증가 양상이 구별됨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림 1>에서 지역 단위의 단체들이 전국 단위 단체들에 비해서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에 따르면 종교 분야에서는 단체들의 수가 비교적 완만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그 외의 분야들의 경우는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러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경향이 눈에 띈다.

생태학적 조직 이론과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난 유사 성장 곡선의 패턴에서 볼 때,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 추세를 로지스틱 성장 곡선(logistic growth curve)으로 모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로지스틱 곡선은 인구나 개체 수의 성장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널리 이용되어져 왔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

$$y_t = k/1 + \exp(a - b_t)$$

k : 제한 (최대로 가능한) 성장 크기

t : 시간

이 모형은 S자 모양의 곡선 형태를 띤다. 초기의 시점에서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시점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제한 성장 크기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완만히 증가하다가 결국 성장률이 멈추는 경향을 보이는 곡선이다. 이 곡선은 변곡점을 중심으로 대칭의 형태를 보이고, 중간 시점에 위치한 변곡점에서 성장률은 최고에 이른다. a 는 성장의 시점을 나타내는 모수로서, a 가 커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게 되는 시점이 지연된다. 한편 b 는 성장의 시점과 함께 성장의 속도와 관련된 모수로서, b 가 커짐에 따라 증가의 속도는 빨라지고, 따라서 본격

적인 성장의 시점 또한 당겨진다. 그러므로 a 는 조직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그리고 b 는 전반적인 성장을과 관련된다. 위 모형은 제한 성장 크기를 가정하기 때문에 a 가 감소함에 따라, 그리고 b 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을은 일찍 감소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로지스틱 성장 곡선 모형에 근거하여, 비선형적 회귀 분석을 통해 a 와 b 두 모수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 제한 성장 크기 k 는 윌(Yule)의 방법과 선택 시점 방법을 통해 추정치를 구하였다(Nair 1954).

〈표 4〉 로지스틱 곡선 모형에 따른 최우도 추정치

	a	b	R^2
전체	5.2765	0.0893	0.9881
전국 단위	4.4690	0.0871	0.9852
지역 단위	7.4472	0.1191	0.9877
국제 단위	4.6926	0.1131	0.9853
지역자치/빈민	13.8104	0.2355	0.9978
사회서비스	5.9106	0.1003	0.9833
환경	14.6800	0.2538	0.9889
문화	6.0595	0.0827	0.9832
교육/학술	4.9098	0.1144	0.9864
종교	4.1292	0.0844	0.9979
노동	3.8154	0.0914	0.8801
농어민	5.3201	0.1032	0.9952
경제	4.2887	0.1083	0.9706
시민사회	6.6050	0.0923	0.9699
시민사회일반	6.0588	0.0811	0.9534
여성	5.5965	0.0731	0.9741
청년/학생	6.5442	0.0902	0.9003
인권/추모사업회	9.3010	0.1454	0.9904

* a 와 b 의 추정치는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 위치함.

<표 4>는 위에서 설명된 로지스틱 곡선 모형을 통한 비선형적 회귀 분석 결과를 시민단체들의 활동 범위, 활동 분야, 그리고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몇 개의 주요 세부 분야들까지 범주화하여 제시한다. 1945년과 1996년 사이에 시민단체들의 성장이 그 활동 분야에 따라 상이한 유형을 보임을 <표 4>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경우 활동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단체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나(지역 $a=7.45$, 전국 $a=4.47$) 그 성장 속도는 더 빠른 것을 나타났다(지역 $b=.12$, 전국 $b=.09$). 시민 사회도 중앙집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 시민 단체의 수와 활동은 서울과 수도권의 단체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김태룡 2003). 하지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시민 단체들이 늦게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성장률을 고려해 볼 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전국 단위의 단체들에 비해 오히려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성숙과 맞물려 가는 경향인 것으로 파악되며(신희권 1999), 신사회운동은 지역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진단과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임현진·공석기 1997).

활동 분야 범주에 따라 살펴보면, 노동, 종교, 경제, 교육/학술 분야 단체들이 그 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찍 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권위주의적 정권은 반대세력을 종교집단이나 직업집단과 같은 비정치적 단체들로 포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inz 1975), 군사 정권 하에서도 종교, 경제, 교육/학술 분야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상대적으로 양호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노동 분야의 경우 민주화 시기에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구사회운동 분야로서, 분석 결과는 과거에 비해 1990년대 초반 이후 체제 도전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사회운동조직이 급격히 쇠퇴해 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조대엽 1999).

반면에 환경, 지역자치/빈민, 시민사회, 문화, 사회서비스 분야 등

은 상대적으로 늦게 성장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자치/빈민과 환경 분야의 경우, 단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매우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환경 $b=.25$, 지역자치/빈민 $b=.24$). 시민사회 분야에 속하는 세부 분야의 경우, 인권/주도사업회 분야 단체들이 그 수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다른 분야들에 비해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a=9.30$, $b=.15$). 이러한 결과들은 정부와 첨예하게 갈등하던 기존 사회운동조직과는 일정 부분 차별화된 신사회운동조직들이 1990년대 들어 시민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 인권, 여성, 지역현안 등과 같은 다양한 특정 이슈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급속히 성장하였다라는 진단을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조대엽 1996; 임현진·공석기 1997).

VII. 맷는 말

본 연구에서는 1997년과 2000년 두 기간에 걸쳐서 출간된 <<한국 민간단체 총람>>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시민단체 성장의 양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 자료는 시민단체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인 설립연도 정보와 회원수 정보를 담고 있다.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설립연도 정보에 있어서는 결측의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회원수 정보에 있어서는 결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의 단체들의 회원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소개한 자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1996년과 1999년 두 시점에서의 회원수 정보만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성장을 회원수를 통해 검토하는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

다. 하지만 이후의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간다면 한국 시민사회 성장에 대한 매우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설립연도 정보는 결측의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성장을 연구하는 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최근 3~4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들은 다수가 보고 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성장 추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자료의 성격상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단체들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본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되는 성장 곡선은 실제 성장 곡선이 아닌 의사 성장 곡선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단체들의 해체율이 대동소이하다는 전제 하에서, 분야별 성장 양상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의사 성장 곡선은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성장 곡선 모형에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성장 곡선 모형에 근거하여 비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최우도 추정치를 구함으로써, 각 분야에 걸쳐 성장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성장 양상을 추론해야만 하는 자료의 한계상, 여기서 제시한 의사 성장 곡선은 단체들의 활동 영역별로 현재까지의 성장 속도를 추론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이것이 실제 시민단체의 성장추세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자료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진 단체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단체들의 해체율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분야별로 단체들의 해체율이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러한 전제는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 1997년 총람에서 나타났다가 2000년 총람에서는 사라진 단체들을 확인해 보았으나, 제외된 이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정보로 해체율을 추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데이터 파일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축적

한다면 시민단체들의 해체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보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 추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론적인 성장곡선을 모형화함으로써 시민단체 성장의 미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동춘. 1990. “한국 근·현대 사회변혁운동.”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37–50.
- 김성국. 1998.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신사회운동의 가능성.” 임희섭 · 양종희 공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나남출판. 15–72.
- 김태룡. 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5–28.
- 김혁래. 1997.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단체(NGO)연구: 현황 및 발전전략.” 《동서연구》 9(2): 37–68.
- 박재호. 1992. 《한국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일연구: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박형준. 1995. “새로운 사회운동과 경실련 운동.” 《경제와 사회》. 27: 76–105.
- 서경석. 1993. “경실련 운동의 평가와 전망.” 경실련 편. 《경실련 창립 3주년 기념 자료집》. 3–12.
- 송호근. 1990. “권위주의적 노동정치와 노동운동의 성장: 한국과 남미의 비교연구.”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 6: 37–68.
- 시민의 신문. 1997. 2000.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의 신문.
- 신광영·박준식. 1990. “80년대 후반 한국노동조합의 조직적 성격과 발전과제.”

-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 나남출판. 301–334.
- 신용하. 1977.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상 · 하).” 〈〈한국학보〉〉. 제 8–9호.
- 신희권. 1999. “지방정치의 변화와 자발적 조직의 역할.” 〈〈한국행정연구〉〉 8(1):44–67.
- 유팔무 1995.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경제와 사회〉〉 25: 104–121.
- 윤수종. 1992. “한국 근·현대 사회운동사.” 사회문화연구소 편. 〈〈오늘의 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652–667.
- 이균영. 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 이상현. 1993. 〈〈한국환경운동의 이데올로기와 주체: 민간환경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우재. 1984. “70년대 한국사회와 농민운동.” 〈〈농촌현실과 농민운동〉〉. 민중사. 135–176.
- 임현진 · 공석기. 1997. “한국사회와 신사회운동: 운동조직 분석.” 〈〈한국사회과학〉〉 19(2): 90–122.
- 장상환. 1986. “농민운동과 농민조직.” 〈〈현상과 인식〉〉 10(4): 42–75.
- 정근식·조성윤. 1990. “80년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운동.”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의 비판적 인식〉〉. 나남출판. 371–402.
- 정수복. 1994. “지방화 시대의 지역 여성운동: 수도권 부천시와 서울 은평구의 사례 연구.” 한국사회학회 편. 〈〈국제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지방화〉〉. 나남출판. 399–426.
- _____. 1996.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출판사.
- _____. 2000. “한국 시민운동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박재창 편. 〈〈정부와 NGO〉〉. 법문사. 81–104.
- 조대엽. 1996. “1990년대 사회운동조직 분화의 유형적 특성.” 〈〈한국사회학〉〉 30 (여름호): 389–415.
- _____. 1999. “90년대 시민사회의 의식변화와 시민운동의 성장.” 〈〈한국과 국제 정치〉〉 15(2): 199–142.
- 조영건. 1979. 〈〈한국 노동조합운동사: 해방후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_____. 1993. “90년대 민주노동 운동의 전망: 전노협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 정치·사회의 새흐름〉〉. 나남출판.

- 273–302.
- 조희연. 1989. “80년대 한국사회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 박현채·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1』. 41–114.
- _____. 1990a. “80년대 한국사회운동의 전개와 90년대 발전전망.”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13–33.
- _____. 1990b. “50, 60, 7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51–107.
- 주성수·남정일·이남석. 2003. 『한국 NGO 리포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차성수. 1998. “시민사회의 지형변화와 시민운동.” 『지역사회연구』 6: 181–196.
- 최경애. 1992. 『한국 전문환경운동단체의 가치지향과 그 요인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Carroll, G. R. and M. T. Hannan. 1989. “Density Dependence in the Evolution of Populations of Newspaper Organiz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4): 524–41.
- DiMaggio, P. J. and W. W. Powell. 1983. “The Iron Cage Revisited: Institutional Isomorphism and Collective Rationality in Organizational Fie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2): 147–60.
- Edwards, B. and S. Marullo, 1995. “Organizational Mortality in a Declining Social Movement: The Demise of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in the End of the Cold War Er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6): 908–27.
- Hannan, M. T. 1989. “Competitive and Institutional Processes in Organizational Ecology.” in *Sociological Theories in Progress: New Formulations* (edited by J. Berger, M. Zelditch, Jr., and B. Anderson), pp. 388–402.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Hannan, M. T. and J. Freeman. 1977. “The Population Ecology of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929–64.
- Linz, J. J. 1975.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Vol.3: Macropolitical Theory* (edited by F. I. Greenstein and N. W. Polsby), pp.175–411.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McPherson, J. M. and T. Rotolo. 1996. "Testing a Dynamic Model of Social Composition: Diversity and Change in Voluntary 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2): 179–202.
- Meyer, J. W. and B. Rowan.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2): 340–63.
- Nair, K. R. 1954. "The Fitting of Growth Curves." in *Statistics and Mathematics in Biology* (edited by O. Kempthorne, T. A. Bancroft, J. W. Gowen, and J. L. Lush), pp. 119–132. Ames, IA: The Iowa State College Press.
- Pfeffer, J. 1982.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Theory*. Ballinger: Cambridge, MA.
- Popielarz, P. A. and J. M. McPherson. 1995. "On the Edge or In Between: Niche Position, Niche Overlap, and the Duration of Voluntary Association Membership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3): 698–720.
- Sandell, R. 2001. "Organizational Growth and Ecological Constraints: The Growth of Social Movements in Sweden, 1881 to 194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5): 672–693.